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2년 3월 23일 (수) · 주간제 12호 · 통권 제 1563호 · 사례보
풀어보니까 양도소득세
절의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3/ 23 통권 1563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지식경영자다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투명회계와 적법납세시대일수록 서둘러 분할선증
여하여야 한결 가법습니다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과세특례적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과세
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식을 1년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임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교〉

개념, 구분	창업중소기업감면 (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조문의 취지·목적	청년창업, 벤처창업촉진, 에너지 지신기술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 계속영위의 세금감면
감면기간과 비율	① 24년까지 창업, 창업후 최 초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② 과밀억제외지역 청년창업 100%, 과밀억제내청년창업과 과밀억제지역외의 일반창업 50% ③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와 창 업벤처기업은 50%	22년말까지 한시적용,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 + 수도권외 + 일반업종 : 30% 소기업 + 수도권 + 일반업종 : 20% 중기업 + 수도권외 : 15% 소기업 + 도소매·의료업 등 : 10% 중기업 + 수도권 + 지식기반사업 : 10% 중기업 + 수도권외 등 : 5%
적용업종 비교	제조, 광업, 건설, 폐기물처리	제조, 광업, 건설, 출판, 폐기물처리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도매, 소매업, 운수, 여객운송업, 물류산 업
	음식점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과 학기술서비스	전기통신업, 방송, s/w산업
	창업지원특수업종등	기타 대부분의 중소기업업종
추가감면등	상시고용근로자수 증가비율만 큼 감면을 증가	해당 없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63호 / 주간 12호

2022. 3. 23.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투명회계와 적법납세시대일수록 서둘러 분할선증여하여야 한결 가볍습니다	2
C E O 에 세 이	CEO는 지식경영자다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퇴직금 지급관련 - 자산매각 -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 출처리 여부 문의 -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 D/B 형 퇴직연금 적립시 회계처리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일반과세·간이과세 구분과 임대사업자 부가세 비교 -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0 11
직 장 인 Survival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9가지 특징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 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993, 2021.09.16) -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 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 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격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3708, 2021.09.26)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디지털세'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과세특례적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과세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식을 1년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임	13
세 무 정 보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 올진 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영세납세자의 관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16 27 3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37

투명회계와 적법납세시대일수록 서둘러 분할선증여하여야 한결 가볍습니다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필자도 60대 중반이며, 이전 글은 친구들끼리나 은밀히 주고 받을 사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이지만, 동창회 등에서 원고청탁받아 기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솔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가족간 선증여문제를 일별해 볼까 합니다. 50대는 자녀가 아직 20대라 좀 이른 면도 있으나 참고는 될 듯하여, 안세회계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튜브 강의 등에서 사례별로 알아 본 증여쟁점을, 본지에 다시 게재하여 공개토론함에 구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1. 애시당초 배우자부터 애용합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특히 부부간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공동소유·관리합니다. 발생하는 매년 수익도 반분되고, 부동산 양도소득도 반분되어 낮은 세율이 두 번 적용되는 혜택 뿐 아니라, 향후 사망상속세도 반분되어 계산되므로 낮은 세율이 2번 적용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60대 이상 동문들은 지금부터라도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아내 단독명이나 공동명으로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6억원에 이르므로, 연봉 6천만원을 매년 전액 송금하는 것과 같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우선 가능한 흠여놓습니다. 기업활동의 모든 이익에는 법인세부터 근로소득세, 개인배당종합소득세가 붙고, 쓰고 남은 소득잔액에 대하여도 증여세와 상속세 및 부동산이면 취득세 등 소득과 재산이 건너가는 모든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며, 모든 세금은 상당부분 이중과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활동이든 가족간에 재산의 원천적 분산관리가 합법적인 절세의 지혜입니다.
3. 10년 기간마다 분산합니다. 기업이 아닌 일반가정재산은 늦어도 60대 부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해야, 향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분할된 재산별로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자녀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5억원을 자녀 2인에게 60대부터 증여하면, 90대까지 4번×5억×2인 = 40억원에 대하여 20% 이하의 증여세율로 종결됩니다. 또한 최종 10년내 증여자산이 사망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과거 증여 당시의 낮은 시세로 합산되므로 시가상승에 따른 상속재산증가액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상속세는 전체금액을 하나의 신고 단위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각각 따로 계산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총합세금은 선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습니다.

4. 먼저 증여 후 나중 양도합니다. 오래전 취득해서 시세상승차익이 큰 부동산이면 가족에게 분산 증여 후 5년 지나 양도합니다. 양도소득은 약 1억원부터 평균 40%, 3억원 초과부터 4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율은 10억원(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까지도 30% 정도이며, 여러 명에게 분산증여하면 평균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세율 40% 이상에 비해 반 정도입니다. 과세항목도 여러 세목으로 나눌수록 낮습니다. 높은 산을 수직 한걸음으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수월함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선증여시 수증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올라가며, 납부한 증여세도 향후 양도시의 양도원가로 추가합산됩니다.
5. 가업인 경우면 일정지분가액을 선증여합니다. 일반재산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지분의 일부를 선증여해도 35억원까지는 5억원 공제 후 10%인 3억원만 증여세를 냅니다. 가업지분증여는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절대적 세금을 분산감소시킬 수는 없으나, 수증자녀에게 경영지분을 주어 책임경영의식을 심어주고, 경영하는 동안 분산배당금 지급으로 종합소득세도 절감하면서, 자녀주주에게 합법적인 자금입증원천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가업상속공제도 적극 활용합니다. 창업자금선증여와 가업지분선증여는 최종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중소기업가업상속인 경우 상속공제금액을 200억원(10년 이상 경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 차감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부담은 완화됩니다. 그러나 자산규모나 매출규모가 너무 커져서 사망상속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니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그래도 쉽게 증여할 걸 찾아봅니다. 가족간 증여는 언제나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증여할 게 없는 평범한 집은 가족애가 끈끈하지만, 부자집은 덜한 편입니다. 또한 자녀가 너무 이른 나이에 재산을 수증받으면, 자기 힘으로 성장할 본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이 균등배분되면 부부간의 재정문제에 긍정적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각자의 개별적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의 재산관리와 세금에만 국한해 생각한다면, 서둘러 배분 할수록 유리합니다.

개인적 재산관리와 절세방법문제는 본래 은근히 거론될 일인데 실무상의 글이라 더욱 상세히 써야 하지만 그동안 비교표 등으로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개괄제시하며 각자 개인사정특유내용은 개별 탐문과 연구에 맡깁니다.

CEO는 지식경영자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CEO는 지식경영자(Chief Knowledge Officer)다. 지식경영의 중심인물이란 뜻이다. 지식경영이 과거에 없었던 새삼스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었고 노나카 이꾸지로(野中郁次郎)교수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지식이란 대체로 “명확화된 정보의 체계와 그와 관련된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체계란 사실, 의견, 이론, 원칙 등이고 인간의 상태란 깨달음, 이해, 친숙함 그리고 이용현상을 말한다. 피터 드러커는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라고 단순 정보와는 구별했다.

學而不思 則罔(학이불사 즉망) “배우기만 하고 생각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찍이 공자도 단순한 앎보다 가치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노나카 이꾸지로 교수에 의해 주관적 경험지식인 암묵지(Tacit Knowledge)와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분류되었다.

경영이란 핵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지식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 축적, 창출, 학습 그리고 활용이란 상호연동 작용의 흐름을 탄다. 그러면서 자기증식 과정을 반복하며 노후된 지식을 소멸시키면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식경영이다. 이러한 지식경영은 고객과 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수천만년전 지구에 혜성이 충돌했다. 공룡은 하루아침에 소멸하는 대변혁이 이루어졌다. 산업사회에 PC와 인터넷이란 혜성이 충돌했다. 말하자면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지식기반 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혁은 지식혁명을 발생시켰고 또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지식경영시대의 도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은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인간은 오묘무쌍한 존재이기 때

문이다. 무한정하게 가치를 창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신나고 즐겁게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첫째,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요예측의 적중률이 높아야 재고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과 판매 동향이 실시간(Real Time)대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목표와 질서를 잘 지키는 구성원과 협력업체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치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고객중심 문화와 공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보와 평가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확실한 정보 인프라 즉 경영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정보와 지식을 조직이 공유하여 더 큰 가치실현에 기여토록 하여야한다. 기업조직도 CKO를 중심으로 지식시스템 책임자인 CSO(Chief System Officer)와 지식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지식 창고장인 CWO(Chief Warehouse Officer)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미국처럼 강대국이 있는가하면 덴마크, 스위스와 핀란드처럼 강소국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으로는 까사미아가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까사미아는 나의 집을 뜻하는 이탈리아다. 그러나 독자적인 브랜드의 한국기업으로 가구, 침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고급스런 디자인과 패션으로 우뚝 선 지식기반 기업이다. 당차고 알찬 경영실적은 지식 경영에 힘입은 바 크다.

넷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한국기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유연한 조직 속에서 인간의 창조성이 극대화되려면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깨끗함과 열린 경영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퇴직금 지급관련

Q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목적
으로 2021.12.31 일자로 퇴사후(퇴직금 지급) 다시 2022. 1월에 재입사 해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2021년 12월31일 퇴사후 2022년1월1일에 재입사가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매각

Q 자산매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자산 매각거래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
세를 확인 후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월에 사고 익월에 바로 매각할 경우에도 감정평가
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달간격으로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각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A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

Q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
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오래전에 고객사에 납품한 재고를 고객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당사
부품 교체 및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납품한것이 아니고 단지 제품 안에 부품을 교체한것인데 세금계산서 및 매
출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최초 납품계약에 따라 부품 무상교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제품납품후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부품교체 거래의 경우로 부품교체비용을 추가로 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출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Q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카메이커에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금형을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금형제작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카메이커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해당금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금형제작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질문인 즉, 금형실패 또는 폐기하는 비용이 아니었다면 금형매출로 인식을 했을텐데 이 경우 폐기금형의 제작비용 회수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금형대 회수금-금형대 제작비용의 차는 잡수입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아니면 금형매출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A 금형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매출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D/B 형 퇴직연금 적립시 회계처리

Q D/B 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로서,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DB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이미 자산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액 초과 불입액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

상담실 백종훈 차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이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①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 §129)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에 대해서는 4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② 내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법인세법 §73①)

법인에게 일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1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③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 §156)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란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되거나 상계대체 전환되어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특정시점을 정하여 그때까지 지급사실이 없으면 지급된 것으로 의제시키고 원천징수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특정시점으로 지급을 의제하는 이유는 실제 지급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함이다.

① 배당 결의일부터 3개월되는 날이 지급의제시기임(소득세법 §131①)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결산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이익에 대한 소득처분(배당)결의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한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득처분(배당)이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되는 않는 경우에는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상법에서도 배당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배당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지급의제시점을 두어 세법상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②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경우라도 지급의제시점에 원천징수납부의무 발생함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결의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022년 2월이나 3월중에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을 결의한 경우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3월이 되는 시점인 5월말이나 6월말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6월 10일 또는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추후 임시주총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하더라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3월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시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주주의 배당소득 의제시기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8-137...1).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일반과세·간이과세 구분과 임대사업자 부가세 비교

일반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가능	부가세 환급	불가능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공급가액 × 10%	매출세액	공급대가 × 40%(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불가)
없음	납부의무 면제	면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만 해당)

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개정 전후 공제액 비교

개정 전	구분	개정 후
2020년 인하분 50%	공제금액	2021년 인하분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공제 적용기간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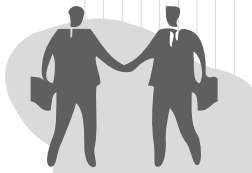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15)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 사업화시설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	8	16	4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세제 공약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TF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 - 보유세는 납세자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절차 투명하게 공개 -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는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증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 장기적으로 다주택자 증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인 세율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 → 초과누진세율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적용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9가지 특징

1.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they see things objectively)
세익스피어의 유명한 대사 중, “세상에서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했다.
2. 내려 놓을 줄 안다.(they let go of entitlement)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운명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3. 냉정하고 침착한다.(they keep an even keel)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4.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다.(they don't aspire to be happy all the time)
긍정적, 부정적인 상반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공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것이 강한 ‘멘탈’을 갖는 비결이다.
5.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이다.(they are realistic optimists)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낙천주의자의 ‘희망’과 비관주의의 ‘현실성’을 견지하며 ‘현실적인 낙천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6.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산다.(they live in the present moment)
현재에 사는 것이 뇌 활동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7.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they are persitent in the pursuit of their goals)
한 정신학자는 성공에 관한 그녀의 연구에서 투지와 기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투지를 가지는 것은 장기적 목표를 이뤄낼수 있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8. 놓아줄 때를 안다.(they know when it is time to let go)
‘멘탈’이 강한 사람은 놓을줄 때를 안다. 행동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행동의 결과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쿨하게 놓아줘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고 포기해야할 땐 포기하라.
9. 그들의 삶을 사랑한다(they love their lives)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삶의 시련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여곡절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받아 들이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것들을 포용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라.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과세특례적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과세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식을 1년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993, 2021.09.16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 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직 중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산정방법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국조-1221, 2021.09.17

질 의

- 내국법인(갑법인)은 00항만공사와 인천항의 남항 제1항로 정비 준설작업 및 북항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
- 갑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해당 정비 준설작업을 위하여 록셈부르크 법인 (신청법인)과 계약을 체결(216.8.)
 - 계약에 따르면 갑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준설작업에 필요한 자항식 호퍼 준설선 등(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이하 '준설선')을 제공 받는 대가와 준설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질의

- (질의1) 신청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질의2)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가 「한국·록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회 신

1.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3708, 2021.09.26

■ 질 의

-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1억원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103, 2021.09.30

■ 질 의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
 - (갑설)계약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
 - (을설)계약금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디지털세'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loBE 이행체계와 관련한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공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주석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이 포함됐다. 주석서의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해 준비되어 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물관·수목원 입장때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다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가능)'로 박물관이나 수목원을 관람(또는 입장)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비대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세금포인트는 주로 징수유예·납기연장을 요구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으로만 쓰이다 보니, 사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용도를 넓힌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혜택 확대 이후에도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위주의 혜택 외에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자 확대를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면제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20%(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 국세청, 2022. 3

- ◎ (발간배경)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 (구성내용)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① 사실관계 ② 질의내용 ③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참고자료 순으로
 - ▷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발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구성내용

-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민들이 양도소득세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② 다주택자 중과제도 ③ 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④ 장기임대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하며,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 구성은 ①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③ 국세청의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하여
 -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 ▶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함께 수록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3 이용방법

-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의 별도 코너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며, 접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향후계획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 ▷ 지난해 주택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과 세금(’21년 3월)」 책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21년 6월)」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 올해에도 이러한 납세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 ▷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 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하는 등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하여 「2022 주택과 세금」으로 3월 중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 ◎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이사를 위하여 '18.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9월 잔금청산 및 이사·전입함
 - 김국세씨는 종전주택(A)을 '22.3월 양도할 예정임
- Q.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A.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 * 20.9월 잔금청산일

2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이친절씨는 '20.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20.6월 종전주택(A)을 양도함

-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1.9.25일임

Q.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전입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1 의 경우)
-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2 의 경우)

해석사례 1.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2021.12.13.)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09.2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20-부동산-1625(2021.0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의 취득



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로 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임차인의 거주여부,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는 사실 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 2주택(A,B)을 보유한 이민국씨는 '20.7월 1주택(B)을 양도(과세)한 후, '21.1.1. 현재 1주택(A)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함

Q.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1.1.1.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 '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하고 있는 최부자씨는 '21.2.1.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A·B·C 3주택자가 되고

－ 한 달 뒤인 '21.3.1. A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B·C)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21.4.1.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함

- Q. '21.1.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21.1.1. 현재 또는 '21.1.1.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 ◎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대한씨는 이사를 위하여 '21.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2월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2.3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Q.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21.12월)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 ◎ 조정대상지역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B아파트 분양계약을 '17.8월 체결(계약금 지급)하고, '20.4월 B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일부(50%)

**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B아파트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함**

－ 김성실씨는 B아파트 취득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B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A. '19.12.17.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1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다만, 귀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9.12.17. 이후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함

해석사례 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2020.04.16.)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7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 **홍길동씨는 '14.6월 서울 소재 노후주택(A)을 취득하였고 해당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18.4월 아파트로 준공됨**

Q.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A.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 이후 준공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부동산-1236(2020.11.30.)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8.3. 이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2항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2021.02.05.)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즉, 거주요건이 적용됨



8

'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17.6월 서울 소재 주택(B)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4월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함
- 홍길동씨는 '21.2월 A주택을 양도(비과세)한 후, '23.5월 이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Q. '17년 8·2대책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저처럼 '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해야 하나요?
- A.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부동산-2174(2020.06.26.)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2019.10.30.)

주택분양권 및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서울에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이성실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1.6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할

－ 이성실씨는 '22.4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21.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2021.12.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2021.2.28.)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2021.09.28.)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17.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하고 '21.6월 주택(B)을 취득함('18.3월 사업계획승인, '21.6월 사용승인)

- A·B주택이 소재한 인천 지역은 '20.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김국세씨는 '24.5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경우,

- 비과세를 받기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 귀하의 경우 B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1-부동산-4599(2022.02.0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21-법규재산-5924(2022.02.17.)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릅니다.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행정안전부, 국세청, 2021. 3

- 정부는 지난 3.4.~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 ▶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
 -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 * 기 확보된 조립주택 우선 제공, 부족분은 신규 제작·지원
 -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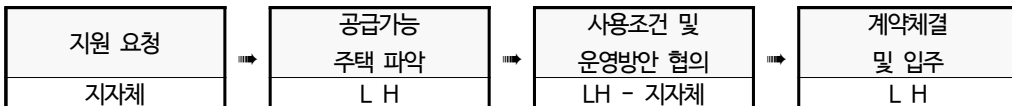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전·반소 피해주택(피해조사 후 확정)
- ❖ [지원절차] 수요조사 → 시공사 선정 → 제작·기반공사 → 입주

-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 ▷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용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

- ◆ (공급대상 주택)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 ⇒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 (임대조건) 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 감면
 - *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
- ◆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연장 가능
- ◆ (공급절차)



- ①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 ▷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 24시간 핫라인 상담 전화(☎1577-0199)
 -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 ▷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 ▷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 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 ▷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②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 ▷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 ※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 연료비 지원 검토

지원분야	지원기준		
전기요금	멸실 건축물		파손 건축물
	요금 100% 면제 (월 200만원 한도)		요금 50% 경감 (월 100만원 한도, 주택용은 100% 면제)
가스요금	용도	전파주택	반파·침수주택
	취사용	1,680원/가구당	1,680원/가구당
	취사·난방용	12,400원/가구당	6,200원/가구당

- ▷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분) 등을 추진하고,
-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 ▶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 ▶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3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 ▶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벼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 ▶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 → 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구분	지원내용	
융자	중소기업	최대 10억 이내, 1.9%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이내, 2.0%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90% 보증, 보증료율 0.1%
	소상공인	최대 2억원 이내, 100% 보증, 보증료율 0.1%

-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 ▷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사업 〉

- (지원규모) 일반용자 5,490억원, 특별용자(신용보증부 운영자금) 1,000억원
- (기준금리)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1분기 2.25%)
* 중소기업은 0.75% 우대(1.5% 적용), 중저가 숙박시설 1.25% 우대(1% 적용)
- (이자감면) '22년 용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용자금리 일괄 0.5%p 감면지원
- (상환유예) '22년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용자원금을 1년간 유예

-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용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용자 개요 〉

- (지원규모) '21년 1,062억원(+기금변경 300억원) → '22년 1,843억원
- (이율/형태) '22.1분기 2.1%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국민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 (지원대상) 우수체육용구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2항 등

- ▷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용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⑤ 세제 및 금융 지원

- ▷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채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
-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 ▷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 ▷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 아울러, ”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하였다.

참 고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요약

구분		주요 지원내용	비고 (소관)
[1]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긴급구호	구호물품·심리 지원	• 응급구호세트·식료품·급식차 등 긴급 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	행안부
	긴급복지 상담소 운영	• 긴급복지상담소 운영, 이재민·피해가구 심리지원	복지부
	통신서비스 지원	•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기지국 운영,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	과기부
	대피시설 전력 등 지원	• 이재민 대피시설 긴급전력 무상 설치 지원(콘센트, 전등) • 취사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 보급 등 지원	산업부
주거지원	임시조립주택 지원	• 7.3평 규모, 1년 무상거주(연장 가능) •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행안부
	긴급지원주택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2년간 임대료 50% 감면하여 지원	국토부
	재해 주택복구자금 융자	• 복구 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연1.5% 금리로 17년간 분할 상환)	국토부

[2]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국민 연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및 연체금 징수예외 국민 연금 납부 예외(최대 1년) 의료급여 지원(선정기준 충족 시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3개월 면제·감면) 	복지부
	전기·가스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최대12개월분)·가스요금(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산업부
	통신요금·전파사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요금 50%),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분) 지원 	과기부
생활회복	생활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軍 자산 활용 세탁·난방·식수·의료·방역 등 생활회복 지원 	국방부
	심리·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부
	생활용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에 생활용수 지원 	소방청
[3] 농·임업인 영농재개 및 지원			
영농재개	무상 양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보유 범씨(202톤), 씨감자 무상공급 	농식품부
	농기자재·농기계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농기자재(비닐, 호미, 낫, 삽, 육묘상자, 상토 등) 보급 농기계 제조업체 A/S반 무상 수리 지원 	"
	축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가축 수의사 진료·처방,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 지원 	"
경영자금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2.5%) 면제, 신규 대출 지원 	"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연기·신규대출(20백만원) 지원(연이율 1.8%, 1년 거치 1년 상환) 	산림청
[4]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중소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융자·보증지원(보증료율 0.5% → 0.1% 인하) 소상공인 보증 한도 확대(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 기 대출 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만기연장(1년 이내) 	중기부
경제활동	지역상품 판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상품 판매전 개최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기간(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피해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10% → 15%) 	"
	관광업체 등 금융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개발기금·체육진흥기금 융자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 '22년까지 원금 도래업체에 대한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0.5%) 	문체부



[5] 세제 및 금융 지원

세제·금융	국세 징수 유예, 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국세청
	지방세 감면 및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면제, 지방세 납세·체납처분 유예(6개월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새마을금고 대출지원(대출금리 0.3%내외 우대, 최대12개월 만기연장) 	행안부
	재해관련 보험금 및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지급(추정보험금 50% 내 선지급) • 대출보증 상환 및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복구자금 특례보증 공급 	금융위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울진·삼척(3.4.~), 강릉·동해(3.5.~)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 특히,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의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해당

□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
*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 에서 신청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 2**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참고 3**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11일 (금)	3월 14일 (월)	3월 15일 (화)	3월 16일 (수)	3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228.70	1232.40	1238.60	1241.70	1240.40
일 본 엔 (JPY)	1057.81	1048.90	1047.22	1049.49	1043.89
영 국 파 운 드 (GBP)	1608.43	1607.79	1611.05	1619.74	1629.58
캐 나 다 달 러 (CAD)	962.59	967.69	966.03	972.17	977.77
홍 콩 달 러 (HKD)	157.07	157.42	158.20	158.65	158.60
위 안 화 (CNH)	194.35	194.87	194.77	194.25	194.70
유 로 화 (EUR)	1350.71	1347.38	1354.16	1361.34	1367.23
호 주 달 러 (AUD)	904.51	898.79	891.85	893.47	903.88
싱 가 폴 달 러 (SGD)	904.15	903.92	906.34	909.30	912.7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3.42	293.81	294.55	295.15	295.51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 2021. 3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 7. (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 ▷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입니다.
 - *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 소액사건 인용율('20년) : (국선대리인 선임) 21.0% > (세무대리인 미선임) 8.6% (약 2.4배)
 -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19년 237건 ⇨ '21년 396건 (67.1%p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 7. (월) 국세청 본청에서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위촉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앞장서준 전임 국선대리인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 ▷ 새로이 위촉된 국선대리인도 향후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하여 '나눔문화'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영세납세자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본청)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사진

- ▷ 앞으로 제5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138개 세무서관서에서 294명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활동하게 될 예정이며, 각 관서별로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청 1개, 지방청 7개, 세무서 130개

-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022. 3. 2.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역량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 ▷ 자격별로는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입니다.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인원	294명 (49명*)	241명 (40명)	29명 (1명)	24명 (8명)
비율	100%	82.0%	9.8%	8.2%

* 여성 국선대리인

- ▷ 특히, 올해에는 나눔·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눔세무사 및 나눔회계사* 10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세무사 및 회계사(2009.5.1. 첫 시행)

- 또한, 제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하여는 2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재위촉하였습니다.

구분	합계	신규 위촉	연임
인원	294명	190명	104명
비율	100%	64.6%	35.4%

II 국선대리인 제도

1 제도 취지 및 경과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 ▷ 국선대리인제도는 2014년 처음 시행*된 이래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최초 시행) '14.3.3., (법제화) '14.12.

** 누계 지원건수 ('14년~'21년) : 2,777건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억원 이하

소유재산

* 법인제외,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제외

- ▷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역량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서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3. 기준, 명)

합계*	본청(세종)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321명	12명	91명	58명	44명	30명	25명	20명	41명

* 임기는 2년으로 신설 세무서 위촉 등으로 임기 미만료된 국선대리인 27명 포함

2 그동안의 성과

- 국선대리인제도 최초 시행연도인 2014년 이래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2,7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한편, 국세청은 생계에 바쁜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용(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사건의 인용률에 비해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2014년 제도 시행부터 평균 2배 이상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국선대리인이 무보

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금전 지급

3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 요청에 처분청은 부모가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제외 결정
⇒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양자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에서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농지에 대하여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있는 등 재촌·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대토감면 적용배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내역, 항공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제시하여 재촌·자경 사실 입증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대토감면 적용 결정
- 신청인 명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 실사업자에 제기된 수사기관 수사자료, 임금체불 진정 사건, 실사업자와의 문자 내용 등을 수집하여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에서 실사업자에 과세하도록 결정
- 거래처 법인의 임원이 신청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 거래처 임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자백에 따른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고, 검찰수사 및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신청인의 소명기회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재조사 결과 취소)

4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을 지정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 국선대리인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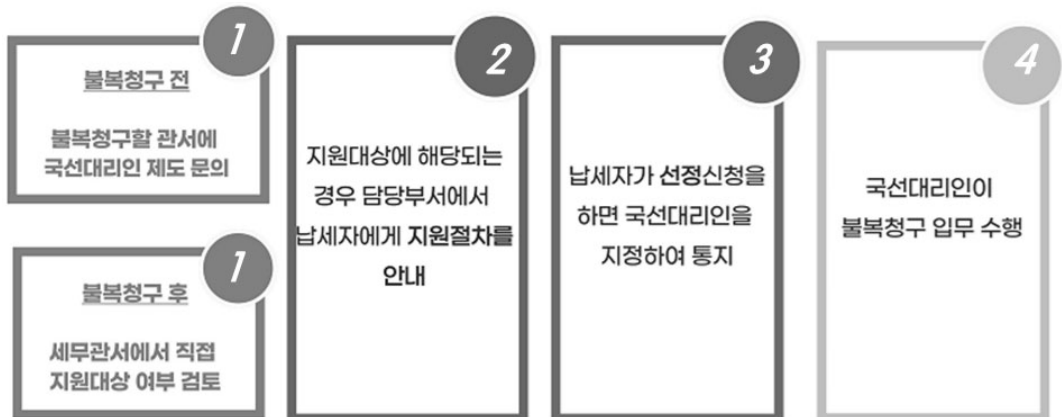
- 한편,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하고 있습니다.

III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영세납세자들이 보다 많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선대리인제도 지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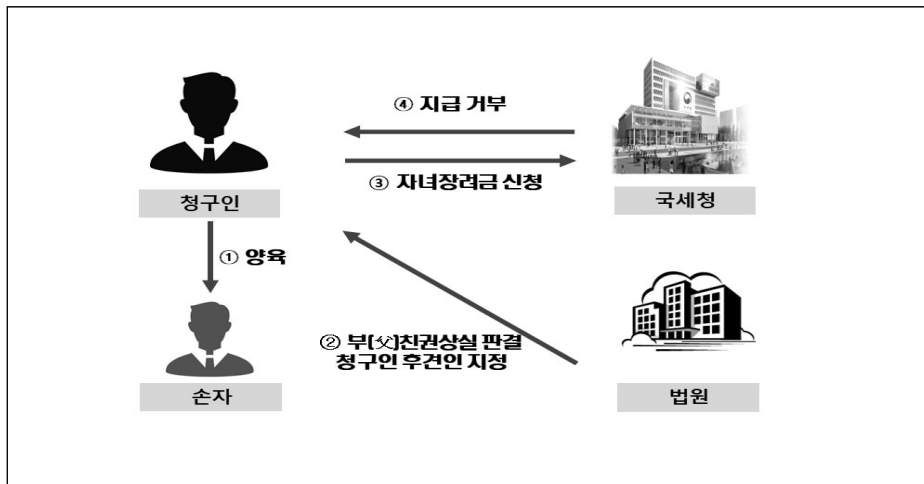


참고 1 -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사례 1 조부모가 손자들을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 신청인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손자들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청인의 손자들에게 부모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 국선대리인의 활동

-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아들은 이혼 후 가출을 반복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고,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으로 손자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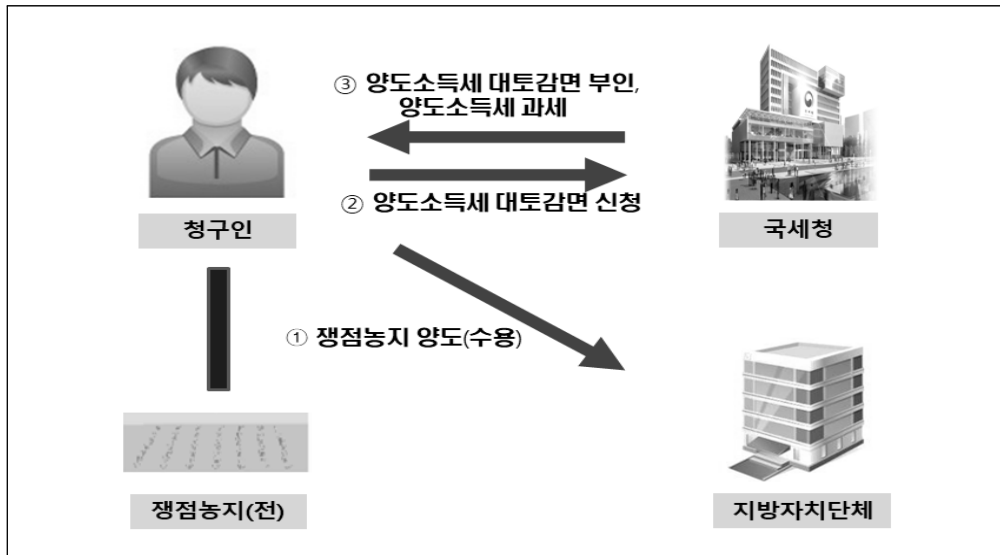
- ▶ 신청인이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사례 2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하여 농지 대토감면 신고 인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 청구인은 강원도 소재 농지(전)를 4년 이상 자경하다 강원도청에 양도(수용)함에 따라 쟁점 농지 양도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근로소득 발생된 사실이 있고 자경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지장물 계약서만 제출되어 쟁점농지에 대해 재촌·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대토감면 적용 배제함



● 국선대리인의 활동

- ▷ 청구인이 실제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내역, 항공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제시하여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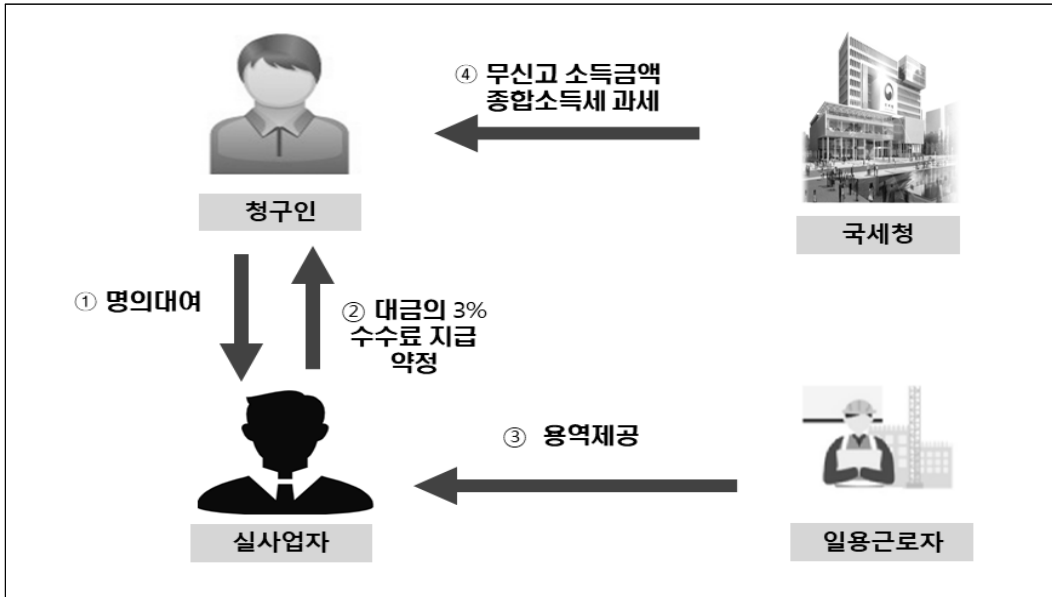
- ▷ 쟁점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도록 결정

사례 3

폐업한 사업장의 실소유주를 확인하여 명의대여자인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 처분청은 신청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을 결정·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 해당 사업장의 운영형태, 용역제공 흐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 실사업자에게 제기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임금체불 진정사건 자료, 실사업자와의 문자내용, 쟁점사업장 근로자 확인서 등을 수집·제시하여 실사업자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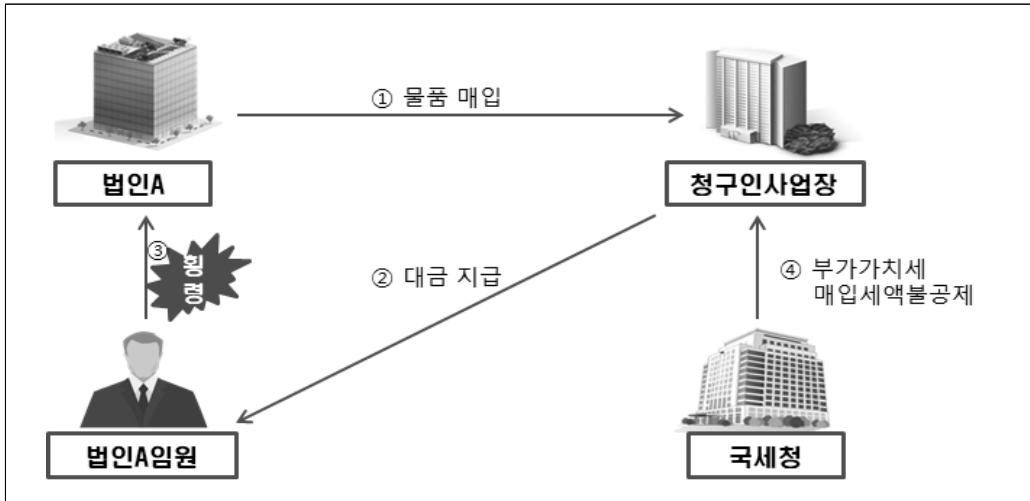


사례 4

신청인에게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에서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전부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 거래처 법인의 임원이 신청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 신청인이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횡령금액 전부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래처 임원의 진술서를 수집·제출하고,
- 법원의 심리가 거래처 임원의 자백 및 진술에 의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어 신청인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

● 결정내용

- ▶ 피고인의 자백과 진술을 근거로 과세되었고, 신청인은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매입금액을 재조사 결정(재조사 결과 취소)

참고 2 -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신청서 제출
 -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으로도 신청 가능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리기)
 -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 (사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 ①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
 -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 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 (사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
 - ②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

참고 3 - 국선대리인 관련 통계

1. 제5기 국선대리인 현황

(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294	44	250
본 청	12	12	-
서울청	88	5	83
충부청	55	6	49
인천청	34	4	30
대전청	27	3	24
광주청	24	3	21
대구청	18	3	15
부산청	36	8	28

2.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국선대리인 지원 건	-	30.5	28.2	31.3	16.3	21.0	22.9	21.0
대리인 미선임 건*	16.3	17.3	19.0	14.3	13.2	10.3	7.5	8.6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3천만 원('18. 2. 13.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건)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원 건수	2,777	355	452	385	283	256	237	413	396